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09. 9. 21(월) 14:00		
배포일시	2009. 9. 21(월) 11:0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
담당과장	나주범 과장(2150-4570)	담당자	김영민 사무관(2150-4571) 김미정 사무관(2150-4572)

제목: 2009년 「시·도 경제협의회」 개최

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'09.9.21 14:00 정부 과천청사에서 『09년 시·도 경제협의회』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

- 지역개발관련 최근 OECD 및 세계은행(WB)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주는 시사점
- 관광지·관광단지, 지역특구 등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활성화 방안
- 공장입지 규제개선, 외국인투자 촉진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(지자체 건의사항 중심)

* 16개 시·도 부단체장, 지경부·국토부·행안부 등 참석

< 안건 별첨 >

- ① 선진국의 지역정책 동향 및 시사점
- ② 관광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
- ③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
허경욱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,

-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금년 2/4분기 성장률이 OECD회원국 중 최고치(+2.6%, 전기대비)를 기록하였으며,

- 최근 OECD와 World Bank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탈출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언급
- 다만, 경제위기를 실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**투자**와 **소비** 등 **내수회복**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,
 - **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**
- 최근 선진국의 **지역정책 패러다임**이 지역의 既 보유자원을 활용한 **특화개발 전략**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
 -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경우도 **5+2 광역경제권 구축, 기초생활권 발전** 등의 새로운 **지역발전정책**을 추진하고 있고,
 -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**세부정책을 치밀하게 설계**하는 한편, 지방의 역량확충을 위한 **중앙·지방간 연계협력 강화**가 필요하다고 강조
- 금번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렴한 지자체의 애로사항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논의가 향후 **지역발전 정책 마련과정**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- 아울러 시도경제협의회를 앞으로도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**중앙·지방간 협력을 강화**하고 지역이 **현장에 가까운 목소리**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이 자료는 '09.9.21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선진국의 지역정책 동향 및 시사점

2009. 9. 21

기 획 재 정 부

■ ■ 목 차 ■ ■

I. 선진국의 지역정책

1. 불균형 성장속에서 소득수준 격차 완화 추구	1
2. 3D의 추구	4
3. 세가지 정책수단의 추진	5
4.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	6
5.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	9
6.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	10

II. 시사점 및 향후 지역정책 방향

1. 집중과 균형의 조화	11
2. 지역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전략 수립	12
3. 중앙·지역간 상호 연계 강화	12

I. 선진국의 지역정책

◇ 최근 선진국은 그간의 중앙정부 직접 지원위주의 지역 개발정책에서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지역개발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중

- 이에 대한 최근 국제기구(OECD, WB)의 분석보고서¹⁾를 검토하고,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

1. 불균형 성장속에서 소득수준 격차 완화 추구

□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은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, 지역간 소득격차는 초기에는 증가되다가 점차 완화(☞ 참고)

- 생산의 집중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성장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

- 지난 '70~'80년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에도 불구하고, 지역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

-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 사회로 이행하면서 생산은 더욱 집중되는 추세

* 제조업체의 경우 초기에는 대도시에 집중되다가 대량생산단계로 이행하면서 생산조직이 중소도시로 이전되는 경향, 서비스업체는 대도시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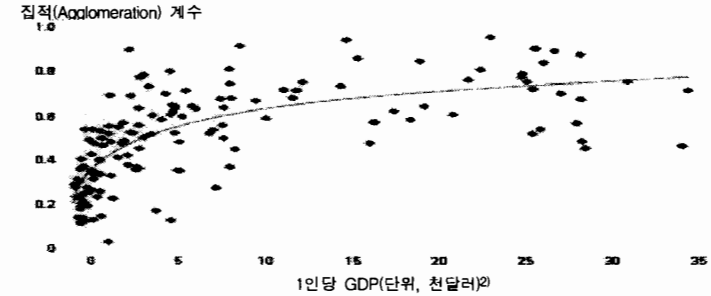
□ 생산의 집중에도 불구하고, 생산 집적지로의 인력 이주에 따른 지역간 임금격차 해소, 각종 소득 재분배 프로그램(사회계층간) 등으로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들

1) '09.2월 OECD TDPC(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) 보고서 및 World Bank 'World Development Report : 2009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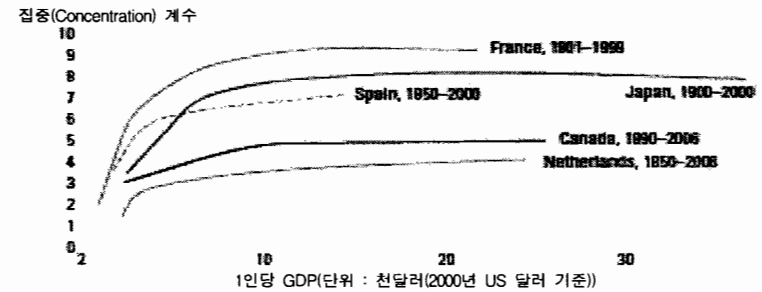
【 참고 ① : 경제 발전에 따른 생산 집적, WB 】

□ 지역, 국가, 국제단위 모두에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생산은 집중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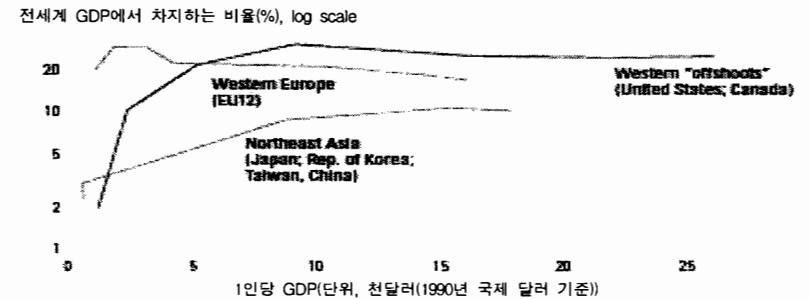
가. 지역단위에서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중



나. 국가단위에서 성장지역에 생산이 집중하는 현상



다. 국제적으로도 특정 지역에 부(wealth)가 집중



2)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불변가격 기준(2000년 US달러 기준)

【 참고 ② : 지역간 생활수준의 수렴현상, WB 】

□ 지역, 국가, 국제단위 모두에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활수준 격차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점차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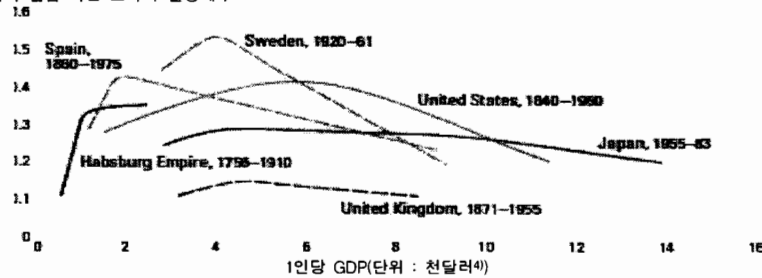
가. 지역단위에 있어, 경제 발전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방간 소득격차가 점차 감소

농촌(지방) 대비 도시지역 1인당 소비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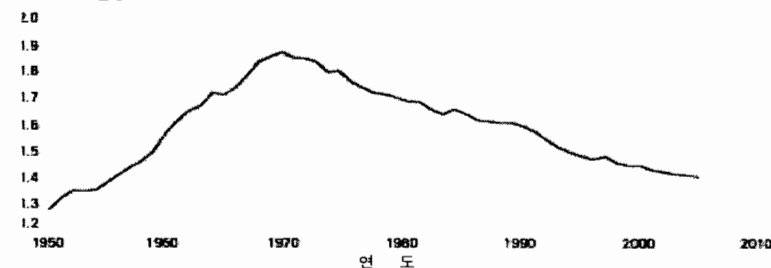
나. 국가단위에 있어,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의 소득격차가 증가한 후 차츰 감소

지역 임금 혹은 소득의 변동계수³⁾



다. 국제적으로도 소득격차가 확산된 후 수렴(단, 성장지역에 한함)

1인당 GDP의 변동계수



3) 변동계수가 작을수록 산포가 크지 않고 균일함을 의미
4) int'l Geary-Khamis Dollar (불변)

2. 3D(높은 Density, 낮은 Distance와 Division)의 추구

□ 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'경제통합'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제 지리적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함

* 지역(local), 국가(national), 국제(international)단위 모두 해당

① 생산의 집중 (높은 density)

- 생산이 집중되어야 **집적효과(agglomeration)**를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(도시는 집적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체)

② 시장까지의 거리 단축 (낮은 distance)

- 시장까지의 거리(상품·자금·정보의 이동속도)가 짧아야 성장 지역으로부터의 **확산효과(spill over effect)**를 누릴 수 있음

* 일본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떨어져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적 거리를 단축

③ 주변지역(세계시장 포함)과의 통합 (낮은 division)

- 주변지역과의 **교역장벽**이 낮아야 **전문화(specialization)**를 통한 **규모의 경제** 실현이 가능

- 특히, **교통·통신수단의 발전**(급속한 비용절감)은 **전문화**를 통한 **규모의 경제** 실현을 가속화

3. 세 가지 정책수단(제도형성, 인프라, 특정지원 지원)의 추진

-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세 가지 경제 지리적 요건(3D) 및 이를 통한 경제 통합 달성 가능
 - ① 제도형성(spacially blind institutions) : 토지·이주·무역 관련 규제 개선, 기본 공공서비스(교육, 보건 등) 제공 등을 통해 생산의 집중 실현
 - ② 인프라(spacially connective infrastructure) : 교통·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장까지의 거리 단축
 - ③ 특정지역 지원(spacially targeted interventions) : 슬럼가(slum) 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통합 촉진
- (제도 형성) 지역발전단계에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요인은 제도형성임
 - 특히,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 확충은 지역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(성장지역보다 낙후지역에서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)
- (인프라)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구과밀이 심해질 경우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추가적으로 요구
 - 과밀지역 주변지역의 경우 성장지역과 인프라로 연계될 경우 성장의 확산(Spill-Over) 효과를 누릴 수 있음
 - 다만, 인적자원의 확충 없이 인프라만 구축될 경우 오히려 자원의 유출(not linking, but leaking) 가능성
 - * 운송비용 절감으로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지역을 선호할 가능성

- (특정지역 지원) 도시화가 고도로 진전되면서 도시 빈민가(slum), 게토(ghetto)지역 등이 형성될 경우 특정지원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
- 위의 세 가지 지리적 요건(3D)을 갖추기 위해서는,
 - 무엇보다 생산의 집적(agglomeration), 원활한 이주(migration)*, 전문화(specialization)라는 시장 메커니즘이 최대한 작동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
 - * 경제활동이 성장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낙후지역 → 성장지역으로 인력의 이동이 뒷받침 되어야 함
 - ※ 도시의 성장(agglomeration), 이주 촉진(migration), 무역확대(specialization)는 지난 2세기간 선진국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소

4.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: 보조금 지원 ⇒ 특화개발전략

- 지역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(Paradigm shift)
 - 지역정책은 제로섬 게임(생산의 지역간 이전)이 아닌 포지티브 게임(새로운 성장기회 창출)으로 인식되어야 함
 - * 각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화함으로써 균형발전 및 전체적 국가 발전을 도모(포지티브 게임)

	전통적 지역 정책	↔	새로운 패러다임
목적	지역간 격차를 단기적으로 보완하여 경제적 성과를 균일화		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미활용 자산을 활용
전략	부처별·분야별 접근		통합적 개발 프로젝트
수단	교부금 및 중앙정부 보조		Soft(인적자원 등) + Hard(SOC 등) 인프라 확충
주체	중앙정부		다양한 차원의 정부 (중앙, 광역·기초 지자체)

- 지역간 불균형 축소를 위한 기존의 **Top-Down** 방식의 보조금(지역간 자원의 이전) 위주의 정책에서,
 - 지역에 **내재된 자원의 활용**을 통한 **시장원칙**에 입각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이동
 - * 보조금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은 자생력 확충에 근본적으로 한계
 - 중앙·지방(광역·기초)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**거버넌스의 중요성**이 부각되고 있음

□ 농촌정책(rural policy)

- 많은 국가들의 농촌정책이 여전히 **'농업' 중심***으로 추진
 - * 중앙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지원, 농업 담당부처의 농촌정책 주도 및 다른 부처들의 상대적 무관심 등에 기인
- 선진국의 경우 **농촌 지역의 독자적 기회 및 경쟁력**에 바탕한 **발전전략**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
 - *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경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, 각종 자연 및 문화자원, 넓은 토지, 낮은 지가 등 다른 지역에는 없는 농촌만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개발전략 필요
 - 새로운 시장 개척, 토지의 **대체적 활용**(농업 및 비농업), **자연환경의 보존, 삶의 질** 제고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
 - ⇒ 농업중심에서 탈피하여 **경제활동의 다변화** 필요
- 낮은 인구 밀도, 지리적 열위 등을 감안해 볼 때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**지역간 협력** 및 **ICT(정보통신기술)에 대한 투자** 등이 중요

□ 도시정책(urban policy)

- 최근 OECD국가의 도시정책 변화에는 두가지 트렌드가 존재
- 첫 번째 트렌드는 **균형발전**에 대한 실용적 접근
 - 그간 많은 국가들이 과도한 도시지역 집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**대도시지역의 개발을 제한**
 - 이러한 지방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**유의미한 성과를 달성**하지도 못한 측면
 - 경제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**대도시의 경쟁력을 유지**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**도시지역의 집적을 활용**하는 경향
 - 이에 따라 **외부 불경제의 심화**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, 사회적 통합 등의 이슈가 중요해짐
- 두 번째 트렌드는 도시정책이 더욱 **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**으로 변하고 있는 점
 - 기존의 도시 정책이 쇠퇴하는 지역의 재생 등 보수적인 수준에 그쳤으나,
 - 정책 포커스가 가장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분야에서 **글로벌 경쟁력**을 키울 수 있도록 변화

※선진국의 도시정책 변화 사례

- ◇ 프랑스는 그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해 왔으나, 수도권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
- ◇ 일본은 산업배치촉진법을 '06년에 폐지하고 대도시밖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보조금 중단
 - 대학과 기업이 대도시내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

5.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

- 지역 경쟁력 제고에 있어 혁신이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
 - 지역혁신이 미흡하면 인프라와 인적자원 확충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(인적자원이 他 고성장지역으로 유출)
 -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, 클러스터(cluster) 촉진 및 대학·기업·연구소간 연계 강화 필요

6.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

- ◇ 공공투자·재정지출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,
 - 지방정부의 능력배양, 재정지원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
 - ◇ 또한, 대규모 공공투자에 있어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·민간간 협력(PPPs)의 필요성도 증대
-
- 개별 지역단위에서의 공공재 등 생산은 규모의 경제효과*를 실현하기 어렵고, 외부경제효과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
 - * 예를 들어 병원 및 고속도로의 경우 공급대상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
 - 아울러, 지자체의 자체 재원 및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지역 스스로의 자생적인 발전전략 마련에 한계

- 따라서 효율적인 공공재 등의 공급 및 지역개발정책 마련을 위한 중앙·지역간 및 지역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
-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간 협약(contract) 체결 또는 필요시 통합(merger) 추진
 - 공공재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변지역 서비스를 대신 이용(specialization)*하게 하거나, 지자체간 공동생산(joint production)**하는 방안 추진
- * 스위스의 경우 특정지역은 병원, 대학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, 주변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
- ** 일반적으로 전문화보다는 공동생산방식을 선택(독일, 스페인 등)

II. 시사점 및 향후 지역정책 방향

1.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부응

-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도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전략을 추진 중
 - 지역의 특화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5+2 광역경제권,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
 - 기초생활권 :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, 항토·지역연고산업의 발굴 및 고부가가치화, 역사·문화의 장소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과제(전체 10개)로 선정
 - 광역경제권 :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개발전략으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목표
- 다만,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정책을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, 특히, 지역개발 담당 인력의 역량배양이 요구
 - 이를 위해 중앙·지방간 교류확대,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컨설팅 기능 강화 등 중앙·지방간 연계확대 추진
- 농촌의 경우 깨끗한 환경, 자연 및 역사·문화자원 등 특화보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의 다변화 필요
 - 이를 위해 농림부 뿐만아니라, 국토부, 문화부, 지경부 등 다수 관계부처에서 농촌개발정책 마련시 적극 참여
-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효율화 추진

2. 중앙간 및 지방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

- 지역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육성, 인프라 확충, 규제 선진화 등 다수의 분야에 함께 접근(multi sectoral approach)
 - 지역정책 마련시 교육부, 국토부, 행안부, 지경부 등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 (→ 관계부처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)
- 지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될 경우 공공재 공급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외부효과 반영이 어려움
 -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역간 통합 또는 지역간 협약체결을 활성화 (→ 지역간 상호 연계체계 강화)
 - 지역간 협약체결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

3. 집중과 균형의 조화

- 성공적인 지역발전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생산의 집적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
 - 정부의 기초생활권 및 5+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*될 수 있음
 - * 기초생활권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, 광역경제권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생산의 집적 활용 등

- 다만, 동 계획들이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부 정책들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차질없이 이행 추진 필요
- 높은 **density**, 낮은 **distance**와 **division** 등 세 가지 경제 지리적 요건(3D)이 달성되도록 **세부정책**을 통해 뒷받침
 - 높은 density :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적인 토지공급 등 제도개선
 - 낮은 distance : 교통·통신 인프라 확충 및 이주(migration) 촉진
 - 낮은 division : 교역장벽 완화
- 특히, 낙후지역일수록 **인적자원 확충이 지역개발의 핵심 요소**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**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** 지속 확대

이 자료는 '09.9.21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광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

2009. 9. 21

기 획 재 정 부

■ ■ 목 차 ■ ■

I. 추진배경 [현황 및 문제점]	1
II. 투자효율성 제고전략	
1.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강화	2
2. 공원위원회 역할 개선	3
3. 연계개발 활성화	4
4. 체계적인 남해안 관광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	5
5. 지자체 역량배양	5
6. 추진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	6
〈참고〉 주요 관광개발사업 현황	8

I. 추진배경 (현황 및 문제점)

- 지역특구, 관광단지, 기업도시 등 각종 관광 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
 - 유사한 사업의 중복투자로 투자효율성이 낮고 지역별로 구심적 역할을 할 대표적인 개발계획이 부재
 -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이 미흡하고, 중앙·지자체(광역·기초 포함)간 협의채널도 활성화되지 못함
- 이에 따라 '09.7월 발표된 「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*」에서는
 - * 자연공원·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개발규제를 합리화하고,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추진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
 - 지역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
-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시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

<참고: 「남해안 관광투자활성화 방안」 중 관련부분>

- 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체계구축
 - 지역특구계획, 남해안 개발계획 등 신청시 타지역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를 포함하도록 함
 -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청시 중복여부에 대한 항목포함
- ②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해 체계적 관광개발 유도
 - 관광개발계획 신청시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(재정지원 등)
 - 대규모 관광투자가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

II.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

1.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평가강화

- 각종 관광개발사업 심의시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(심사 지침 개정)
 - 지역특구, 관광지·관광단지, 기타 관광개발사업 신청시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항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
 - * 지역특구위원회, 남해안권발전위원회, 중앙도시계획위원회, 기업도시위원회, 경제자유구역위원회, 관광개발기금운영위원회 등 심사지침에 반영
- 각종 관광개발사업 예산지원시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
 - 관광부문 예산사업 신청시 중복투자 여부 항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(관계부처 및 지자체 통보)
- 중복투자 여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중복 및 난개발 사업추진 유인을 제거
 -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 중복투자 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예산지원이나 계획변경 요청시 소관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
- 마리나 항만 개발은 해양·레저부문이 지역개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,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권역별 시설수요에 부합되도록 시행

- **마리나항만기본계획**(’09.12 고시예정)상의 **권역별 마리나 수요를 토대로 마리나항만 지정여부 및 규모 결정**
- 「**관광개발관리시스템(가칭)**」을 구축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**관광개발 관련정보**를 총괄적으로 관리·홍보(문화부)
 - * 국토부는 지역개발관리시스템(<http://ris.land.go.kr>)을 구축하여 개발 촉진지구, 특정지역 등 개발계획 수립시 동 시스템에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지역특구, 기업도시, 관광지, 관광벨트, 관광클러스터 등 **부문별 DB를 연계**하고,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**Gateway 구축**(구체적 DB 구축방안은 ’10년 상반기까지 마련)
- 개발계획 추진예정 기관은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**계획수립 단계에서 중복여부 및 연계개발 가능성** 등을 파악
 - * 개발계획 승인 후 추진기관은 해당지역의 통계정보 및 지역행사, 여타 지역개발사업 현황 등도 시스템에 같이 입력
- 「**관광개발관리시스템**」의 **활용정도 및 관리현황**을 개발 계획 **집행결과 평가시 반영**

2. 공원위원회 역할 개선

- 공원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**공원위원회 역할 개선**
- 관광개발사업 **공원위원회 심의시 중복투자 및 경관계획과의 부합여부 점검**

-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**공원위원회 심의 요청시 중복투자 및 경관계획과의 부합여부**를 포함하도록 의무화
- **난개발 및 환경훼손**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**심사 엄격화** (건축물 높이, 용적률 등 허가요건 강화)
- 지역 핵심사업 **우선순위 분야를 중심으로 완화된 규제**(건축물 높이 등)를 적용
 - 남해안 선벨트 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,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우선 지원
 - 주변지역과의 **연계개발**이 가능한 사업도 적극 지원
-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**입지적정성 평가지침을 제정**(’09년 하반기)

3. 연계개발 활성화

-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**개발의 시너지 효과**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지원
- 각종 관광개발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시 **연계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우대**(관계부처 및 지자체 통보)
 - 대규모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

4.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(Grand Design) 및 경관계획 수립

-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남해안 선벨트계획에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('09년 말까지 수립예정)
 - 선벨트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단기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, 이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
-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강화
 - 중앙정부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, 이를 토대로 지자체(광역, 기초)는 자체 경관계획을 제정
 - 경관계획 관련 민간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 수립 기회 마련('09년 하반기)
 - 경관가이드라인 및 경관계획 수립시 국제적인 디자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
 - * 경관가이드라인의 효율적 제정을 위해 국토부, 환경부, 문화부 공동 참여

5. 지자체 역량배양

- 중복투자·난개발 우려를 방지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 배양이 중요
 - 선진국의 지역개발정책 조사·분석 및 홍보강화(시·도 경제협의회 채널 활용)

- 국내외 특화개발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산(관광 DB에 등재)
-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관(중앙부처 또는 시·도지사)은 매뉴얼*을 작성하여 개발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,
 - *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령, 자원조달방법, 승인절차 및 각종 법령 사항 등을 포함
-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차별적·독창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되도록 컨설팅 강화

6. 추진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

-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의 채널 구축
 - 남해안의 경우 기(既) 구축된 3개 시·도간 발전공동협의회 활성화
 - 지자체간 협약(contract)체결을 통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- 효율적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·지자체간 협의채널 구축
 - 남해안의 경우 중앙정부(국토부, 문화부, 환경부) 및 남해안 3개 시·도로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및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담보
 - 남해안 3개 시·도간 협의채널(공동협의회)에서는 남해안의 경관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

-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**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**(작성방향에 대한 컨설팅 강화)

□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개발 확대를 위한 **정부차원의 시책을 관광개발 DB에 등재**

〈참고〉 주요 관광개발사업 현황

① 지역특구(지경부, '04.9월 시행)

- 기초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, 규제특례를 적용(현재 58개의 법률에 대한 126개 규제특례가 법제화)
- '04년 이후 총97개 지자체의 124개 지역특구를 지정·운영중('09.6)
 - * 향토자원진흥(49개), 관광레포츠(31개), 교육(18개), 산업·R&D(13개), 유통·물류(9개), 의료·복지(4개)분야

② 기업도시(국토부)

-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개발 제안('03.10), 특별법 제정('04.12)
- 6개 시범사업 선정('05.7~8)
- 태안(관광레저형), 충주·원주(지식기반형), 무안(산업교역형)·영암·해남(관광레저형), 무주(관광레저형)

③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(문광부)

-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 및 휴양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시·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곳
- 지정현황 : 관광지 230개소, 관광단지 21개소, 관광특구 26개소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

④ 관광클러스터(문광부)

- 이순신 등 5개 핵심테마 중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모
- 사업내용 : 5개 핵심테마 37개 사업('10년~'14, 사업비 7,479억원)
 - 이순신(12개), 섬(7개), 공룡(5개), 습지(4개), 크루즈(9개)

⑤ 남해안 선벨트계획(국토부)

- 초광역개발권의 하나로 남해안을 목표권, 남중권, 부산권 3개 거점을 중심으로 성장시켜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구축
- '09.7월 기본구상 발표, '09.12월 개발계획 확정예정

이 자료는 '09.9.21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
-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 중심-

2009. 9. 21

기 획 재 정 부

■ ■ ■ ■ ■ ■ ■ ■ ■ ■ 목 차

I. 제도개선 추진경과	1
II.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	
1. 공장 신·증설 추진	2
2. 외국인 투자촉진	4
3. 경제자유구역 활성화	5
4. 관광투자 촉진	6
5. 기타 투자환경개선	7

I. 추진경과

<추진배경>

- 경제위기를 실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**민간투자 회복** 등 **내수확충이** 관건
 -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**규제를** **발굴·개선함**으로써 **투자여요인을 제거**해 나가는 것이 **긴요**
- 이를 위해 **지자체 건의사항**을 중심으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**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방안**을 마련

<추진경과>

- 지자체 건의사항 접수**(‘09.7.13~31)
 -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36건의 건의사항을 제출

<주요건의사항>

공장 신·증설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조성 가능면적 상향조정 ▪ U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
외국인 투자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간접투자자 영주권부여제도 도입 ▪ 한·중 국제산단 개발지원 등
기타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▪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등

- 이후 **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**(‘09.8.20~9.18)
 - 기(既) 반영되었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번 대책에서 제외하였고, 유사한 내용의 과제는 통합

II.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1. 공장 신·증설 추진

가.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·증설 제한 완화

- (현황)** 자연보전권역 내 **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***(3만㎡미만), **첨단업종 공장 신·증설 가능면적 제한****(1천㎡ 이내)으로 **투자유치에 애로**
 - 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, 14조
 - *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

- (개선)**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면적규제 개선방안 마련

나. U턴기업 지원대책 마련

- (현황)** 해외진출 국내 기업들이 경제위기와 주재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, 한·EU FTA타결 등으로 **국내로 U턴 고려 중**
 - 해외진출 기업들의 U턴은 국내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(개선)** 장기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및 임대료 부담완화
 - 새정부 국정과제로 **외국·U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**를 위해 저가의 **장기임대산업용지**(3,300만㎡)공급을 추진 중
 - (공급조건) 임대료는 조성비의 3%, 임대기간 최대 50년
 - (공급현황) '08년 232만㎡, '09년 250만㎡ 지정

-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U턴기업에게 입주 최우선 순위 부여

☞ 향후 충분한 수요가 확인되면 특정지역을 U턴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

- 외국·U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임대료*를 저렴하게 적용하고 입주기업 평가시 가점부여**

* 부산항신항 40원/m², 광양항 30원/m², 평택·당진항 500원/m²

** 입주기업 선정 평가시 U턴 국내투자기업에 가점(+3) 부여

다. 도로로 분리된 연접공장용지의 공장증설 개선

- (현황) 공장용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,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장증설에 애로

- 상평지방산단내 무림페이퍼(주)는 현재의 공장부설 주차장을 공장으로 활용하고, 도로앞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

- 도로 앞 공장부지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주차장만의 설치는 어려움

- (개선) 제조시설 증설에 따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연접 도로로 분리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

-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시 편법적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허용추진

2. 외국인 투자촉진

가. 간접투자자 영주권 부여제도 도입

- (현황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인 5인 이상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

- 휴양콘도, 리조트 등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, 영주허용 등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유치에 어려움 발생

- (개선)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휴양콘도, 리조트 등 부동산 구매시 장기체류 및 영주권 부여 추진

- 일정금액(50만불 또는 5억원) 이상 부동산 구입시 거주(F-2)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용 및 국내 체류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영주(F-5) 자격 부여 검토

나. 한·중 국제산단 개발지원

- (현황) 무안기업도시내 추진되고 있는 한·중국제산단은 한·중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요

<사업개요>

- 개발규모 : 536만평, 1조 7,600억('05~'11년)
- 참여기업 : 중국 51%, 국내 49%(농협, 두산중공업, 무안군 등)
- 주요시설 : 한중 산업단지, 차이나시티, 산동성 단지 등

- (개선) 입주수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

3. 경제자유구역(FEZ) 활성화

가. 외국 교육기관 설립조건 완화

- (현황) 경자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자격을 비영리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,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
 - 다만,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일부 과실 송금 허용
- (개선) 제주영어교육도시 영리법인의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진출을 검토 추진
 -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

나.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제한 완화

- (현황) 경자구역내 초·중·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재학생 수의 10%이내로 하되,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%까지 허용('09.7.1)
 - ⇒ 정주 외국인 학생수의 부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 애로
 - ※ 일반지역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은 학생정원의 30% 이내로 하되,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로 20%까지 허용
- (개선)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경과를 보아가면서 내국인 학생비율 추가 확대 검토 추진

4. 관광투자 촉진

가. 공원공원 규제완화

- (현황) 「자연공원법」상 공원밀집마을지구(20호 이상)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에 애로(신안 흥도)
 - 공원구역 내에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투자유치에 애로(신안 흑산면)
- (개선) 공원밀집마을지구(20호 이상)를 공원구역 재조정시 제외 추진(신안 흥도)
 - * 타당성 조사('08.12~) 결과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년까지 공원구역 해제여부 결정 예정
 - 경비행장 사업은 공원위 심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지원

나. 하천구역내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규제개선

- (현황) 춘천호반에 호텔, 워터파크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(7,277억원)중이나,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 (BTB리조트개발)
- (개선) 동 사업이 하천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 계획 확정고시('09.9월)

5. 기타 투자환경개선

가. 공원구역내 행위제한 완화

- **(현황)** 독립공원에 풍력발전기를 설치(993억원)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나, 자연공원 내에서는 동 설비 설치가 금지(경남 밀양시)
- **(개선)** 지자체에서 공원구역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 추진

* 발전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원구역 해제 가능(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)

나.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

- **(현황)** 현재 서비스업 분야는 동포를 제외한 일반외국인 고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인력난 심각
 - 카지노, 쇼핑몰,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, 주류 및 음료 도매업(제품의 상·하차, 배달 등) 등
- **(개선)** 인력부족 정도,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분야(관광업 및 주류도매 분야 등) 외국인 고용 허용여부를 결정
 - 특히 카지노, 쇼핑몰 등 외국인 고객이 많은 업종은 외국어 사용능력도 감안(영어, 중국어 등)
 - 관광호텔의 경우 11개 산업단지 외로 외국인 고용 확대 추진 검토

다.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대상 완화

- **(현황)**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벽지지역(5호이상 거주지역)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
 - 현재까지 99%이상 전기공급이 완료되었으나, 벽지지역 5호미만 마을의 경우 전기공급에 애로
- **(개선)**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전기공급사업 대상범위를 완화(5호이상 → 3호이상)** 추진 검토

* 기준변경시 추가예상부담 : 506억(벽지 145억, 도서 361억)

**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」 시행령 제2조 개정